
2018년도 대학회계 본예산편성(안) 교수회 검토 보고서

2018. 02. .



[교수회]

목 차

I. 들어가며	1
II. 검토사항 및 제언	1
III. 결론	6

I. 들어가며

충남대학교 교수회는 「충남대학교 예산편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8년도 대학회계 본예산 편성(안)”을 예산편성의 적정성·효율성·형평성의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II. 검토사항 및 제언

1. 대학회계 학술연구비(자체연구비·신임교수정착연구비·CNU 학술연구비·우수논문 게재료 지원 등) 배정의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2017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서 배정된 학술연구비 예산액은 총 47억 원으로, 이 중 자체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액은 32억 원임.
 - 본예산: 27억 원, 추가경정예산: 20억 원
 - 2016년도 학술연구비 예산액(72억 원) 대비 25억 원 감소
- 2017년도에 편성된 학술연구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
 - 학술연구비 총 배정액이 2016년도 대비 25억 원이 감액됨으로써, 교수 1인당 지원되는 재직교원학술연구비와 CNU학술연구비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음.
 - 예산배정 후 산학연구본부(산학협력단)에서 결정한 ‘예산 사용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수인건비 사용이 전면 금지됨으로써 참여교수들의 연구의욕이 크게 저하되었음.
 -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학술연구비 배정액이 최종 확정되고 자체 연구과제 종료일을 대학회계기간 만료일인 2월말에 맞추다보니 연구과제수행 기간이 약 6개월의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연구비 집행에 큰 애로가 발생함.
 -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CNU학술연구비 신청을 포기하거나 연구과제수행기간 내에 연구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3억 원 미집행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에 교수회는 지난 1월초(2018.1.4.) 대학본부 기획처, 재무과, 산학연구본부(산학협력단) 등 예산 관련부서에 송부한 공문을 통해 2018년도 본예산편성안 심의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 바 있음.
 - 최소한 1인당 6백만 원 이상의 CNU학술연구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수준의 학술연구비 예산액(72억 원)을 편성할 것
 - 추가경정예산에서 최종 편성될 경우, 연구기간이 실질적으로 9월에서 다음 해 1월로 지나치게 단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학술연구비 배정 시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것
 - 교수인건비는 외부연구과제에서도 편성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할 때, 학술연구비 사용 시 교수인건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산학연구본부와 협의할 것
- 2018년도 본예산편성안을 심의한 예산편성위원회는 2016년도 학술연구비 예산액(72억 원)과 동일한 요구액 대비 25억 원이 삭감된 총 47억 원을 학술연구비 예산으로 편성함. 이는 2017년도와 동일한 금액임.
 - 교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도와 달리 동일금액을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2016년도 수준의 1인당 연구비 배정은 기대할 수 없고, 2017년도 수준의 1인당 연구비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비 소액배정의 문제는 반복될 것임.
-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의 근본취지는 교수의 연구력 강화에 있으며, 지난 2014년도 이후 지속된 CNU 학술연구비사업의 시행에 의해 연구실적 지표의 눈에 띄는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학술연구비 예산액의 삭감은 결과적으로 교수 1인당 지원되는 액수를 상당히 감소시켜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의 근본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제기됨. 중·장기적으로 교수의 연구력을 약화시켜 학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임.

■ 교수회 권고

- 2016년도 예산액이 원상회복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교수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의 증액편성을 요구함.
 - 대학본부에서 단순히 예산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여건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확보방안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의 인상억제, 입학금 폐지, 입학정원의 감소, 재학생등록률의 저하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의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구비 소액배정의 문제를 학술연구비 중 CNU학술연구비의 수혜를 격년제로 시행함으로써 교수 1인당 600만원을 2년에 한 번씩 배정하는 대안도 있음. 다만,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고, 산학연구본부 학술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과 함께 실행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확보방안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자체연구비사업과 CNU 학술연구비사업의 통합편성방안 또는 자체연구비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논문 게재장려금 지원사업 위주로 교내연구지원사업을 재편하는 방안 등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대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의견수렴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2.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대학회계사업 간 중복 편성의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대학회계사업 간의 중복 편성으로 인해 예산운용의 비효율성과 함께 학교 전체의 발전과 학문단위 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예산배정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대학본부 차원의 예산조정기능이 부재한 가운데 정부재정지원사업총괄 추진단에게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대학회계사업 간 중복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수행케 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교수회 권고

- 대학본부에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대학회계의 편성과 지출구조를 사전에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중복지출이 없도록 하여 대학회계의 건전성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함. 이를 위해 기획처와 사무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본부의 헌신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

- 대학본부 내에 Control Tower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총괄본부(가칭)의 신설을 통해 예산운용의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대안도 있으나, 부서의 신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실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대외 대학평가 지표관리(QS 홍보비 배정)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대학평가에서 충남대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은 문제이며, 그에 대해 대학본부에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실을 다지는 지표관리가 아니라 단기적이고 생색내기 식의 지표관리는 큰 문제임.
- QS평가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학 순위의 향상을 위한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석이며, 이와 같은 성격의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각종 대학평가 중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지는 QS평가에만 신경을 쓰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짐.
-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서 QS 홍보비가 배정된 것에 대하여 교수회는 검토보고서(2017.11.8.)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음.
 - 홍보비의 배정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2018년도 본예산의 편성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향후 반드시 있어야 함.
 - 예산편성의 절차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예산편성위원회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지표관리 예산액을 선집행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함.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위와 같은 교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2018년도 본예산에서 QS 홍보비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음.

■ 교수회 권고

- 보여주기 식의 대학평가 지표관리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지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교수의 연구력 강화, 학사관리체계와 교육의 내실화 등을 위한 대학 차원의 정책·제도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2018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QS 홍보비 예산액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함.

4. 정부재정지원사업 미참여학과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정부에 추진되었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학과별 입학정원이 감축되고 있고, 입학정원의 감축에 따라 등록금수입이 감소되어 대학재정의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각 학과에 배정되는 부서운영비·실험실습비·사업비의 규모도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다른 한편, 지방대 특성화사업(CK-1)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참여 학과는 행·재정적 지원(예: 재정지원, 대응투자, 입학정원 감축인원)을 비롯한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학문단위의 균형발전이라는 학과 간 형평의 차원에서 예산안 편성 시 미참여학과, 특히 소규모학과를 배려하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 부서운영비와 실험실습비는 교직원 수나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른 예산편성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사업비의 경우에는 학교의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미참여학과, 특히 소규모학과의 경우에는 학과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교수회 권고

- 지방대 특성화사업(CK-1) 등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의 미참여학과를 배려할 수 있는 예산편성원칙을 대학본부 차원에서 수립·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함. 이를 위해서는 부서운영비·실험실습비·사업비의 배정에 있어 학과 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예산배정 포물리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도 다각도로 예산지원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함.

III. 결 론

교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2018년도 대학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위의 사항들을 예산편성위원회에서 “2018년도 대학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반영하여 재정위원회에 상정하기 바랍니다.